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최정기*

본 논문은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시민 사회운동의 개념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것은 부분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1980년 이후 간접적인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 양자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5월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새로운 문제제기를 배울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질문과 답들을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편 시민사회운동은 '5·18'과 5월 운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급진적(radical)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해방을 향한 열정과 국제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 주제어 |

5월 운동, 시민사회운동, 민주주의를 향한 급진적 관점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1. 문제제기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막을 내린 1980년의 ‘5·18’은 한국현대사 최대의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비단 광주지역만의 사건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커다란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건으로서의 ‘5·18’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이른바 ‘5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즉 1980년 이후에는 매년 5월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5·18’을 계승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당시의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된 사회운동이 1980년대 중반까지 저항의 최선두에서 제5공화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국은 권위주의 통치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5·18’ 및 5월 운동의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갖는 또 다른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체제나 국가권력,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주의 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은 그대로 사회운동 진영의 이론적 자원으로 흡수되면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민주적인 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번역학문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사회과학은 1980년 이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그대로 사회운동이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80년 이후 이루어진 사회운동의 성장 및 사회민주화는 ‘5·18’을 딛고, ‘5·18’을 자양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5·18’과 5월 운동으로 시작된 1980년대는 1987년의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다. 그때까지의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

가 약화되고 대통령 직선제 등 몇 가지 민주화를 향한 진전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때 까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이른바 ‘민족민주운동’이 쇠퇴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면 영역의 운동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이 단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동구권의 몰락’이라는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즉 그 때까지 민족민주운동 세력들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가 동구권의 몰락으로 의미를 잃게 된 것이 사회운동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또 ‘이제 민주화가 되었으니 조용히 살자’는 식의 안정논리도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시민사회운동’으로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이 등장했다(은수미, 1994: 33).

이와 같이 5월 운동이 1980년대 전반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면, 시민사회운동은 1980년대 후반기에 활성화되어 오늘날까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5월 운동은 오늘날 시민사회운동의 성장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또 5월 운동과 87년 민주화투쟁을 기반으로 성장한 시민사회운동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한 공간에서 형성된 두 운동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이다.

2.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개념정의

개념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NGO라는 개념은 일단 시민사회운동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NGO라는 개념이 부각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일 것이다(조희연, 2001b: 3). 다시 말해 단순한 비정부기구는 사회적 아젠다로 제기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형태의 운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의 비정부기구가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시민사회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시민사회운동인가?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시민이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적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혹자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 및 사회구조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갑오경장 이후의 시기에 시민이 등장했다고 한다. 즉 시민사회의 등장이 봉건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을 대신하여 근대적인 사회제도, 의식구조, 생활양식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세기 전후가 될 것(김호기, 1997: 5)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서양사상가들의 이른바 ‘국가-시민사회’ 혹은 ‘국가-시민사회-토대’로 표현되는 분석틀이다.¹⁾ 이러한 분석틀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생산관계 내지 ‘토대’로 환원할 수 없는 사적 그물망과 결사체의 영역으로 정의된다(손호철, 2001: 19-21). 즉 자본주의로 이행한 사회에서 생산관계 및 경제적 토대를 제외한 사적 결사체의 총체가 시민사회로 되는 것이다.

1)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헬드(D. Held)와 킨(J. Keane), 그람시(A. Gramsci), 아라토(A. Arato)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사회구조 속의 영역으로만 시민사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 결과 현실에서 시민사회운동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위의 정의에 따르면 일제 하의 독립운동조직들, 해방정국에서의 각종 정치조직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발견되는 각종 사회운동조직들과 관변단체들은 모두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가 현실에 적합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한 시민과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정의,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개념정의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서양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국가–시민사회’의 분석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계약론자들에 따르면 강제력을 독점하는 조직체인 ‘국가’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결사체인 ‘시민사회’가 역사적으로도 분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와 개인적 자유의 옹호를 위해 규범적으로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Keane, 1988).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분할과 함께 규범적인 분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 그람시(A. Gramsci)의 ‘국가–시민사회–토대’의 분석틀에서 시민사회는 공론의 장이며, 진지전의 장소이고, 무엇보다도 해제모니를 둘러싼 대결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은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단순한 사회구성내의 영역 이상의 것임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정치적 행동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그것도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방어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행동이 요구되는 장소인 것이다.²⁾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시민이 등장하고, 시민사회가 형성된 시기

2)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운동은 계급간 동맹에 의해 계급모순과 민족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민족민주운동과 구별된다. 시민사회운동과 민족민주운동 혹은 민중운동을 구별하는 입장은 손호철(2001)과 조희연(2003)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는 1980년 이후로 볼 수 있다.³⁾ 즉 1980년 이후 성장한 민족민주운동의 효과로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이 약화되고 사회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이 그대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던 시민사회가 본격화된 것은 6월 항쟁 이후 폭발된 시민사회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는 그대로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린 정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민과 시민사회의 형성은 시민사회운동의 등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세 가지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즉 민족민주운동에 종사하고 있는 저항적 사회운동 조직,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관변사회단체, 그리고 이 양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운동 조직들이 있다(조희연, 2003: 147-154). 그러나 저항적 사회운동 조직과 관변단체, 둘 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시민사회운동 조직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1987년 이후 확장된 민주주의공간 속에서 법적·제도적 수단을 활용하면서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활동하는 신흥운동들을 시민사회운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전계서: 147).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운동 개념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시민사회운동은 단순히 잔여적인 범주가 아니라 사회구성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영역들의 이익을 표현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

3) 이 말이 1980년 이전에 몇 번의 사건들('4·19' 등)이 지닌 시민사회운동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운동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으며,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기능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을 때 운동으로서의 생명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것은 부분적인 이익이나 가치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는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오늘날 시민사회운동으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장이어야 한다. 나치의 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볼 수 없듯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혹은 억압체제의 재생산을 도모하려는 사적 영역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시민사회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3. 시기별로 본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관계⁴⁾

1) 1시기(1980~1987): 민주화를 선도하는 5월 운동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1980년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민주화운동 때문이었다면, ‘5·18’과 5월 운동이 갖는 의미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경험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조대엽, 2003: 177). 그중에서도 1980년에서 1987년 사이의 기간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 시기는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던 시기

4) 시기구분은 5월 운동의 경우 비합법운동과 반합법운동, 국가의례로 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민사회운동은 태동기와 형성기,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 의미를 상실하고, 시민사회운동 조직들이 국가권력의 파트너가 된 97년 이후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였다. 이와 같은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은 있었지만, 간간이 소규모 저항을 시도할 뿐, 조직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시기 에 5월 운동은 제5공화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저항을 연례 행사화하였다(표 1). 즉 해마다 5월이면 망월묘역 참배 후 가두시위라는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5월 운동의 전개는 그 자체로도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 타 사회단체들에게 미친 영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 은 첫째, ‘5·18’의 경험과 5월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사회적 이슈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사회단체들, 예를 들면 가톨릭정의평화 위원회(이하 평화)이나 YMCA, YWCA 등이 점차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과 분단체제를 거치면서 형성된 권위주의 하에서 탈 정치화된 사회단체로 남아있던 이들 단체들이 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사회단체의 시민사회운동 조직으로의 변화는 1980년 대 후반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 였다.

둘째, ‘5·18’과 1980년대 전반기의 5월 운동은 엄청난 자기희생을 통해 군의 정치개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즉 새로운 저항이데올로기를 생성시키고 사회화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의 민 주화운동을 조직화하고 행동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김용철, 2001: 248-249). ‘5·18’이 보여준 군사정권의 야만스러움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 켰으며, 5월 운동이 지배 권력의 균열을 야기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정치권 력의 토대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사회운동의 지향점은 ‘시민사 회’를 넘어서는 것으로 민족민주운동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 이 만들어준 정치적 공간은 그대로 시민사회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결과는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나

〈표 1〉 동 시기 망월묘역 의례의 변화과정

연도	주최 및 참석자	내용 및 진행 형태
1981	유가족, 시민, 학생	당국의 방해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2백 여 명이 참석하여 주도식 진행, 이후 전남도청 앞까지 가두행진 시도
1982	유가족, 시민, 학생	경찰의 진입 차단으로 유족 등 100여 명 만이 위령제를 지냄
1983	유가족, 시민, 학생	경찰에 의해 유가족과 부상자 및 일부 관련자들이 사전에 격리되었지만, 350여 명이 모여 위령제를 지냄
1984	유가족, 부상자, 시민, 학생	최대 규모의 추모제 개최(약 3천 여 명 참가), 이후 참가자들은 시내로 진출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함
1985	5주위, 일부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재야인사, 시민, 학생	추모제 거행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 결성, 5백 여 명이 모여 행사 진행, 위령탑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결의, 가두행진을 시도하였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됨
1986	5주위, 5월 관련단체, 시민, 학생	경찰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이 모여 유족회 주최의 1부 행사와 5주위 주최의 2부 추모제 거행, 당일 6만 여 명이 망월묘역 참배
1987	전남지역 21개 민주단체, 시민, 학생	유족회 주최로 위령제 개최, 행사후 4·13 호헌조치 반대 및 민주헌법 정취 범도민 운동본부 결성

* 정호기(2002: 137)의 표를 인용,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음.

* '5주위'는 '5·18광주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 위원회'의 약자임.

타났으며, 1980년대 후반의 시민사회운동으로 폭발하였다.

2) 2시기(1987~1997):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5월 운동의 방향전환 모색

권위주의적인 억압으로 일관하였던 제5공화국은 임기 내내 5월 운동 및 민족민주운동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으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생명을 다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이 붕괴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지배 권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7년 6월 항쟁 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민족민주운동의 정점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닌 타협적인 측면으로 인해 한편으로는 기존 사회운동 세력의 일부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조희연, 2003: 154). 그리고 5월 운동 역시 이 시기부터 보상과 기념사업을 매개로 일정부분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전개된 5월 운동(표 2)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월 운동, 그중에서도 특히 ‘5·18’을 기념하는 의례와 행사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사들이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반합법적인 공간에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참배객도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93년의 5·13 특별답화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 및 행사참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91년부터는 라디오를 통해 추모제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하였다(정호기, 2002: 138). 5월 운동의 제도화라는 특징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개별 보상과 기념사업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망월묘역이 국립묘지가 되고 ‘5·18’이 국가기념일화 되면서, 그리고 관련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서 대체로 마무리되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운동은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1년까지는 5월 행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꾸리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세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5월 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당시의 정세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개입은 민족민주운동의 추동력이 약화되고, 기념사업 등 5월 운동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정세 때문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5월 운동 자체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이다. 1990년대 초반

〈표 2〉 동 시기 5월 운동을 주도한 단체연합

	단체연합	주도 단체	비고
1987	5·18 광주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 운동추진위원회(5주위)		민족민주운동에 종사하는 인사 50여 명이 결성
1988	5주위, 5월 민중항쟁 계승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민주세력 공동투쟁위원회	민주쟁취국민운동 전남본부	
1989	5주위, 5월 항쟁 계승 및 노태우 퇴진 공동투쟁본부	상동	
1990	5주위,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 및 민중 기본권 쟁취를 위한 광주·전남 민주연합	광주·전남 민주연합	광주·전남지역의 민족민주 운동 조직 40여개가 결성
1991	5주위, 고 강경대군 치사 규탄 및 박승희양 분신 광주·전남 대책위원회	상동	
1992	5주위, 5만명, 민주주의 민족 통일 광주·전남 연합	광주·전남 연합	민족민주운동 조직의 근간이 통일운동으로 구성됨
1993	5·18 민중항쟁 13주기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상동	광주시 및 전라남도의 기념식 참여
1994	5·18 광주민중항쟁 제14주기 행사준비위원회	상동	광주·전남 연합과 5만명의 갈등
1995~1996	5·18 광주민중항쟁 제○주년 행사위원회	상동	
1997~	5·18 민중항쟁 제○주기(기념) 행사위원회	1998년 이후 5·18기념재단 중심의 행사위 구성 및 관할	1997년 이후 5·18기념재단 중심의 행사위 구성 및 정부 주관의 기념식 거행

* 정호기(2002: 139)에서 인용하여, 글의 목적에 따라 약간 수정하였음.

* '5만명'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의 약자임.

에 이루어진 국제연대의 가능성 탐색, 1994년부터 시작된 아시아인권현장의 추진 등은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는, 그 타협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면서 사회운동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것은 시민사회운동의 등장과 시민사회운동 내

부의 다양한 분화현상,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의 약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신체제나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는 민중⁵⁾ 중심의 민족민주운동이 ‘목숨을 걸고’ 투쟁의 선두에 섰다. 그리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의 시민사회운동의 부상은 그러한 민주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 이를 시민사회운동 내부에서 다양한 분화가 진행된다. 그 분화는 한편으로는 관심 있는 영역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민주운동과의 관련성 및 친소 정도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했다(조희연, 2003: 154-158).

그렇다면 이 시기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운동의 형성 및 성장은 5월 운동으로 형성된 사회민주화와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정치민주화의 토양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구의 몰락으로 인해 그동안 민족민주운동 진영이 암묵적으로 갖고 있던 대안적 사회가 의미를 상실했다는 요인 역시 시민사회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운동의 성장이 5월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5월 운동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전환을 위한 모색은 그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 시기에 나타나겠지만 5월 운동이 다양한 방향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는 시민사회운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3) 3시기(1997-현재): 5월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의 일부인가?

‘5·18’을 기념하는 의례가 완전히 제도화되고, 기념사업마저도 대부분 마무리된 이후 5월 운동은, 지금까지의 ‘5·18’ 당사자 중심 사업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방향전환을 모색한 결과가 <표 3>에서 드

5) 이에 대해서는 김진균(2003)을 참조할 것.

리난다.

〈표 3〉에서 눈에 띠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경험을 살려 국제연대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에 동아시아지역의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를 초청하고, 2000년에 아시아 민주희생자 가족의 연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그러한 연대 네트워크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1994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화합을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결국 1998년에 광주에서 아시아 인권현장 선언대회를 개최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2000년에는 제4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대회를 광주와 구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 광주인권상을 제정하고, 국제적인 인권활동가에게 시상하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지역의 5월 운동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지향하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교육운동을 하는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로는 영상물이나 다큐멘터리, 만화 등을 제작하여 이들 단체에 제공하는 것,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역사 및 사회과 교사들을 초청하여 연수회를 갖는 것, 민주화운동이나 ‘5·18’ 관련 토론회나 논문현상 공모를 실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5·18’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술사업이나 홍보사업의 일환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모임과 활동, 학생들과의 관계 등을 통해 5월 운동 스스로가 교육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5월 운동이 나아가야 할 주요한 지향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시민사회운동은 한편으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적 이질화와 다양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둘러싸고 여

〈표 3〉 1998-2001년 시기 5·18기념재단의 추진사업

	1998	1999	2000	
기념, 추모	5·18피해자 영 상채록사업 (1997-2001)	진실조사위원회 등 5·18피해자 조 사사업 5·18진실조사사 업 사진전시실보완 사업	광주인권상 시상 5·18안내 가이드 운 영 5·18피해자 조사사 업 5·18진실조사사업 사진전시실보완사업	광주인권상 시상 기념문화관 개관행사 민주유공자법 추진 기억의 벽(실시, 설계) 5·18진실조사사업 기념문화관 활성화사업
학술, 연구, 문화	홍보용 비디오 제작 홈페이지 구축 대학생논문현상 공모 사업 (1997-1998)	5·18정신계승을 위한 토론회 5·18사진첩, CD 제작 영상기록보존사 업 홍보만화제작	5·18진실조사사업 결과 책자 발간 캐릭터 상품화사업 5·18기념음반제작 사업 독일통일과 갈등해소 를 위한 워크숍	캐릭터 상품 제작 사회단체 워크숍 5·18관련 국외자료수 집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토론회 전국 중·고교 역사·사 회 교사 연수 자료실 활성화 사업 5·18관련 사진제작 배포
장학		장학금 지원(192 명)	장학금 지원(165명)	?
기타		5·18안내 팜플 릿 제작 동아시아 국가폭 력에 의한 피해자 단체 초청·연대 모임	아시아 민주희생자가 족 연대 준비모임	국제사업(인터넷파견) 동아시아 평화·인권한 국위원회 지원 아시아 인권위원회와 연대사업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 대 네트워크 사업

* (재)5·18기념재단(2002: 46)에서 인용.

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⁶⁾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조희연, 2004)라는 담론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동시

6) 이에 대해서는 김호기(조희연, 2001b: 77-82)를 참조할 것.

에 시민사회운동 내부의 실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 시기에는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중첩 및 공존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두 운동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개혁 투쟁 및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있어 보다 발본적(radical)인 입장을 견지하는 민족민주운동과 온건한 입장을 취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의 발본성을 시대착오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민사회운동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이 시기가 되면 양자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발견할 수 없다. 5월 운동의 일부는 스스로를 ‘5·18’ 관련 사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운동 역시 일부 대규모 단체를 제외하면 자신의 활동영역에 한정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5월 운동이 축소되어 1980년대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을 상실하였으며, 다만 국제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운동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5·18’과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면서 청소년교육운동을 주도하는 사회단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변형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4. 개량인가? 보다 근본적인 운동인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운동은 모두 바람직한 것인가? 국가는 억압적인 통치를 하는 곳이고,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인가? 이러한 생각은 일종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태리의 파시

즘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대중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두 나라의 시민사회였다(Goldhagen, 1996). 또 시민사회 개념 자체가 그것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장소와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심지어 21세기에 있어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보다도 오히려 더 ‘반동적’이고 ‘반민주적’일 수 있다는 주장(손호철, 2001: 40)도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 그러한 비판의 상당수는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희연, 2001b: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민사회운동이 서구의 ‘신사회운동’에 비견할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서구에서의 ‘신사회운동’은 탈산업사회라고 하는 사회구성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단순히 생산 중심의 운동이 아닌 재생산영역과 일상적 삶의 영역을 주요한 운동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또한 기존의 운동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외피를 벗어던지고, 사회운동과 일탈이 겹쳐지는 저항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운동은 대표제를 거부하며, 따라서 정치권력의 획득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직접행동을 통한 정체감의 재소유를 주장한다.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면서 다양한 형태(인종, 성, 계급 등)로 분류하고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지배 권력에 대항하면서 ‘신사회운동’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Melucci, 1980: 144-157). 시민사회운동에 기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이 서구의 ‘신사회운동’을 그대로 흡내내는 것은 오히려 잘못일 것이다. 합리화된 국가와 제도정당의 관료화에 대항하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는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국가와 제도정당의 합리화라고 하는 근대적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경험과는

다르다(조희연, 2004: 70). 더욱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앞에서 보았듯이 ‘위로부터의 보수적인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권위주의 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즉 민족민주운동은 자신의 과업을 불철저하게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민족민주운동에게 부과되었던 과제를 그대로 안은 채,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은 무엇보다도 민족민주운동을 ‘구사회운동(혹은 전통적 패러다임)’으로 여기는, 그리고 자신을 ‘신사회운동(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적 형태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러한 개념은 단어 자체가 민족민주운동을 폐기하는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운동에 기대하는 ‘신사회운동’의 효과는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기각이 아니라 사회운동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며,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5월 운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서구의 자율주의자들에 따르면 NGO들과 그들로 표현되는 시민사회운동은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지배 권력의 도덕적 개입이라고 한다. 즉 NGO들은 정부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정언명령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상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의자들이 볼 때 이들은 무기 없이, 폭력 없이 질서유지를 위한 전쟁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 세계적인 지배체제의 질서유지 및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장치라는 것이다(Negri & Hardt, 2001: 69–74). 이와 같은 주장이 허망하게 들리지만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매우 활성화되었다

고 보고되고 있다. 그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운동에 종사하는 단체도 있고, 민주화에 힘입어 결성되는 자발적 결사체도 있으며, 과거의 비제도권 운동조직이 제도권 조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협력하던 관변단체도 있으며, 정부에서 주도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단체들도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운동에 기대하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나 일부 이익단체의 개별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한편 일부 부정적인 사회단체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시민사회운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첫째,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일종의 분자혁명(Guattari, 1998)으로 나아가는 현상으로, 사회운동이 질적 고양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룩된 민주화과정의 성격상 사회 요소요소에 여전히 남아있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가치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민족민주운동과 관변단체, 둘 다를 거부하는 자유주의적인 시민사회운동의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경실련’ 등 몇몇 명망을 얻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에 종사하는 사회단체는 이러한 두 가지 존재형태의 다양한 스펙트럼상의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또 위 스펙트럼상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이들 시민단체들이 직면한 문제는, 과도하게 단순화한다면, 개량인가, 보다 근본적인 운동인가라는 문제로 현상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때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 문제나 정부에 대한 입장, 아젠다 선정에 있어서의 준거지점 등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5월 운동 단체들에게

도 동일하게 제기되는 질문이다. 5월 운동 역시 단순히 ‘5·18’ 관련사업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5·18’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나아갈 것인지의 갈래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결국 민족민주운동의 문제의식을 시민사회운동과 5월 운동이 이어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며, 그럴 경우 ‘5·18’정신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되는 것이다.

5. 맷음말

5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1980년 이후 간접적인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두 운동은 서로에게 토양을 제공하고,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21세기가 시작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회구성이 요구되는 오늘날 양자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5월 운동은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새로운 문제제기를 배울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질문과 답들을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국제연대를 지향하는 5월 운동의 흐름은 이미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운동은 ‘5·18’과 5월 운동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급진적(radical) 관점을 배울 수 있으며, 해방을 향한 열정과 국제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들을 배울 수 있다. 즉 ‘5·18’을 통해 개항 이후 형성된 근대사회에 대해, 그리고 해방 이후 형성된 분단체제 및 권위주의적인 지배 권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신. 2001. “지역사회 시민사회운동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연구소 연구사업 결과발표회 발표자료집』.
- 김광식. 1999. 『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 김상곤. 1996. “5·18운동의 정치 사회적 계승과 발전 전망”. 민주화를 위한 광주·전남 교수협의회·전남사회연구회, 광주매일, 『5·18운동의 평가와 계승』.
- 김성국. 1998.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 한국사회학회 편, 『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출판.
- _____. 2001.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유팔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새로운 지평의 탐색』, 한울.
- 김용철. 2001. “광주항쟁과 한국정치의 민주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창간호.
- 김진균. 2003. “5·18 민중항쟁과 국민국가”.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 문화과학사.
- 김호기. 1997.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한국 민주화 10년: 평가와 전망』.
- 나간채. 1997. “광주지역 5월운동조직의 형성과 발전—5월 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나간채 엮음,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박구용. 2003. 『우리 안의 타자』, 철학과 현실사.
- 박상필. 2004. “NGO학 정립을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2004년 봄호 제61호, 한울.
- 손호철. 2001. “국가-시민사회론: 한국정치의 새 대안인가?”. 유팔무·김정훈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새로운 지평의 탐색』, 한울.
- 은수미. 2004. “연대강화, 연대약화—사회운동의 관계맺기와 한국 시민사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2호.

- 이수훈. 2003. “5월 운동과 국가의 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 정호기. 2002.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대엽. 2003. “광주항쟁과 80년대의 사회운동문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1호.
- 조희연. 2000. “광주민중항쟁과 80년대 사회운동—87년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 _____ 편. 2001a.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 _____ 외. 2001b. 『NGO가이드: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 _____. 2003. “한국민주주의의 전개와 시민운동의 변화”.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문화과학사.
- _____.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 최장집. 1997. “광주민중항쟁의 영향과 그 변화”. 한국정치학회. 『5·18 학술심포지움』.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폴빛.
- 키미야 타다시. 1997.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 5·18: 민주주의로의 이해과 심화”. 한국정치학회. 『5·18 학술심포지움』.
- Guattari, F., 윤수종 옮김(1998). 『분자혁명』. 푸른숲.
- Goldhagen, Daniel Jonah(1996). *Hitler's Willing Executioners: Ordinary Germans and Holocaust*. New York: Alfred A. Knopf, Inc.
- Keane, J. ed.(1988). *Civil Society and the State*, London: Verso.
- Melucci, A.(1980).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정수복 편역(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Negri, A. & M. Hardt. 윤수종 옮김(2001). 『제국』. 이학사.
- Offe, C.(1985). “새로운 사회운동: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정수복 편역(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재)5·18기념재단(2002). 『(재)5·18기념재단 발전계획』.

최정기 2000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논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분야는 사회통제론, 사회운동론이며, 최근의 관심분야는 정신병원, 사회운동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관심을 통해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통제방식 및 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에 주목하고 있다. 전자우편 주소는 jgchoi@chonnam.ac.kr이다.